

## 제 22대 총선 D-8

## 대통령 대국민 담화 맹폭

## “의료붕괴 가속화 책임져야”

더불어  
민주당

불통정권 강조... 환자·국민 부담 호소  
“질문도 없이 일방적 주장만, 사실상 혼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한 대국민담화에 대해 “2000명 숫자에 매몰된 불통 정부, 필수 의료 붕괴를 가속화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촉발한 2000명 의대증원 논란에 의료현장의 혼란과 공백이 심화되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馬耳東風)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였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기자들이 참석하지도 못하고, 질문도 없이, 새로운 내용도 없이,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한 시간 가깝게 전달하는 오늘 담화는, ‘윤석열 불통정권’의 모습 그대로”라며 “대통령의 고집과 정부의 똬리에 여당에서조차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 국민 여론도 ‘협상을 통한 정원조정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5% 수준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22대 총선 인천 계양을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인천 계양구 서운동성당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며 밝게 웃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있다. 정부에 유리한 근거와 데이터를 반복해서 제시하며 오히려 필수의료의 붕괴 해결이 아닌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방적인 윤 대통령의 담화를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자화자찬만 있고, 소통은 없었던 대통령의 50분 담화에 유감을 표한다. 소통 없는 일방적 담화발표는 사실상 대국민 혼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무상보육·교육 로드맵 구체화

## “중앙·지방정부가 재원 분담”

## 국민의힘

‘무상보육·교육 확대’ 재원 7000억 추산  
“내년 부모들의 추가 부담이 사라질 것”

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무상보육·교육 확대를 제시한 가운데,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교육 확대를 실행할 경우 필요한 추가 재원을 약 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재원 분담을 위해 중앙정부의 국고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교육 개정교부금을 활용해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현재 만 0~2세는 무상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까지만 지원받는다.

홍석철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동 중앙당사에서 무상교육 공약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현재 유아 교육·보육비는 월 28만원이 지원되지만, 표준 유아 보육·교육비는 52만원, 56만원으로 국가 지원과 실제 필요한 비용 간에 격차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부산 남구 LG메트로시티 앞에서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홍 위원장은 “그 결과 사립유치원 등 일부 기관에서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은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이 실행되면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부모들의 추가 부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현재도 유아 학비와 보육료 국가 지원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해 추진하고 있다”며 “국고 예산 투입 등 중앙정부 역할도 적극 실천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활용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딥페이크로 영상·음성 조작... 선거 흔들는 ‘AI’

가짜뉴스 제작 등 부작용 심화  
사실상 원천 차단방안 없어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골칫덩이로 떠올랐다. AI 툴을 이용하면 누구나 간단히 특정인의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을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가짜뉴스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엄정 대응 선언 후 실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지만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생성형 AI의 확산을 막기 어려워 더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네이버와 다음 양대 포털의 대처마저 다소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일 오전 기준 892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며 총 638건, 1044명이 단속됐다. 딥페이크 관련 사례도 등장했다. 현재 조치까지 완료된 건은 딥페이크를 온라인에 게재한 게시자에 대한 경고 1건과 준수 촉구 1건, 삭제요청이 207건이었다. 딥페이크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SNS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사례가 전례적으로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선제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의 다짐과 달리 딥페이크 관련한 가짜뉴스 유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안은 사실상 없다시피 한 수준이다.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별도로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단행했으나 실효성이 의심된다.

네이버는 지난달 28일 생성형 AI 서비스인 클로바X와 CUE(큐), 딥페이크 관련 결과 화면에 딥페이크 기술 활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 문구를 삽입했다. 뉴스페이지에서는 선거 관련 허위 정보 댓글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는 자체 선거서비스 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불공정 선거보도 경고·주의를 받은 기사를 모든 페이지도 선거특집 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유해 콘텐츠 필터링 기술 연구도 고도화 중이다.

세계 각국에서 AI를 직접적으로 지목해 선거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하는 데에는 고도로 발달한 AI 딥페이크 및 챗봇 기술이 실제와 구분이 불가능해진 데다 SNS의 발달로 시공간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확산까지 가능해진 배경이 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토론회에서 선거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요소로 AI를 지목했다. 그는 “2016년 대선 당시 푸틴이 SNS에 나에 대한 가짜뉴스를 도배한 사건은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었지만 현재는 비약적으로 발전한 AI가 거의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게 돼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포털의 조치들이 실제 효과를 얼마나 낼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친다.

딥페이크 영상 또는 사진, 음성이 SNS를 통해 확산했을 때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모니터링 AI가 이를 삭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생성형 AI는 극소수다. 더불어 화면상 보이는 콘텐츠 자체에는 어떠한 표식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 붐이 일고 처음 치러지는 선거에 챗GPT를 개발한 미국조차 해결책을 찾는 중”이라며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포털이 단순히 경고문구를 표기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했다고 한다면 너무 황당하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전역에서 열린 차세대고속열차 명명식에서 열차 공식 명칭인 ‘KTX-청룡’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 尹 “속도가 경쟁력... 고속철도망 전국 확대”

##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식

신형 KTX 이름 ‘청룡’ 명명

윤석열 대통령이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속도 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고속철도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일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첫 공개된 신형 KTX의 이름을 ‘청룡’으로 명명했다. ‘청룡’은 청룡의 해를 맞아 힘차게 비상해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줄 것인다는 의미로 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KTX-청룡은 운행 최고속도가 320km/h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국내기술로 설계·제작된 최초의 300km/h급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다.

윤 대통령은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1994년 프랑스 고속열차를 처음 도입했을 때 프랑스 연구진이 ‘한국의 고속열차 국산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프랑스 연구진의 예측과 달리 우리나라는 2008년 KTX-산천을 생산해 세계 네 번째로 고속열차를 개발하고 상용화한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공개된 KTX-청룡을 5월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하고, 이 동시기를 최대 30분 단축하는 ‘급행 고속열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